

#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 문 대통령 “임기 맞추고, 총선 중간평가 역할 합리적” “전국선거 국력의 낭비...개헌하면 선거 줄일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하면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건 등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사례로 들며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게 된다.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제, 그러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어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

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 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나’라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고 자문특위에 당부했다. /뉴시스



미래의 경찰 주역들과 파이팅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미래 경찰 주역들인 초급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미래 경찰 주역들인 초급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개헌 자문안 5대 원칙 文대통령 보고...21일 발의

### 국민주권·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강화 등

### 韓·美 외교 “한반도 정세 긴박” 16일 ‘북미대화’ 조율

한미 양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는 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오는 16일 렉스 틸러슨 미국 부통령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급진화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관한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양국이 북핵문제 관련 공조체제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실무조율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두 달여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한미 양국 각급이 수시로, 또한 투명하게 협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추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특위가 발족한 지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에게 개헌 자문안과 헌법자문특위 경과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자문안 초안을 바탕으로

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란 5대 원칙으로 마련됐다. 먼저 ‘국민주권’ 원칙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와 의사가 과정 및 내용에 최우

선으로 반영되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지향한다.

이와 관련 국민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권 강화’ 원칙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에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뤄 새 정부 국정철학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의미한다.

‘자치분권 강화 개헌’ 원칙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를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 원칙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지향한다.

‘민생 개헌’ 원칙은 서민·중산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의미한다. /뉴시스

## 검찰, 이명박 조사 때 영상녹화한다

### “당사자 동의”...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박근혜는 검찰 나와 영상녹화 끝내 거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영상녹화를 거부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동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도착하면 한동훈 3차장이 직접 조사 취지와 조사 방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을 투입해 조사한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소 관련 수사를 벌여왔고, 특수2부는 뇌물죄관련 수사를 해온 부서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도 이뤄진다.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지난해 3월21일 조사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상녹화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검찰과 크게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끝내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카메라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조사 상황을 보며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는 경호문제 등 때문에 검찰청을 이용하는 국민이나 여러 관련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절차”라며 “가급적이면 1회 조사로 마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아베 “北과 비핵화 전제 대화 높게 평가”

### 北핵미사일·납치문제 해결 촉구...서훈 “한일 협력 중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3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총리관저에서 만나 대북특사단의 방북, 방미 결과와 함께 남북 일본인 피해자문제를 포함한 북일관계에 대한 대화를 약 1시간 가량 나눴다.

우리 측은 서 원장과 함께 방일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자리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노 외무상, 가나스기 겐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이 배석했다.

아베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물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핵미사일, 납치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에 일본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 말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납

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원장은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한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정상간의 의지,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흐름이 시작된 것은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참석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서 원장은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와 아주 유익하고 훌륭한 면담을 했다”며 소감을 말했다. 서 원장은 이어 “평화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내용을 아주 상세히 설명했다”며 “아베 총리는 최근 이룩한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의지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또 아베 총리가 “앞으로의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져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력,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 원장의 발언이 끝난 후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서 원장은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 검찰 특수부 5곳만 남기고 다 없앤다...직접 수사 축소

### 문무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현황 보고...경찰 사법통제 유지 등

검찰이 주로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를 전국 5개 검찰청에 집중하는 등 검사의 직접수사를 축소해 권한을 분산하는 등의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국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임을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했다.

검찰은 그동안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지부서의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직접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고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

법통제와 소추 판단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다만 대형 부정부패 사건 등 고도의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는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고검이 소재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대 검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타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사에 한해 상급 검찰청 승인을 받아 수사하고 이외에는 사법경찰에 범죄정보를 넘기도록 했다. 또 조폭과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

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확대됐던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 등이 필요할 때는 별도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수사권 조정 관련 검사의 사법통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치경찰의 수사는 ‘민주통제’를 우선하고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사법통제가 배제된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 및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등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장심사 제도 역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형집행정지 등을 이양해 법무부 산하에 형집행정지를 신설했던 방안과 불기소됐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재정신청 사건의 전면 확대 및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 /뉴시스

호매민평

이태헌

MB의 부메랑

어어어 정치복커야

태헌